

# 가축법 개정안 '국회 심의' 위한 논란

### 법제처 "고시 국회 통제, 3권 분립 위배" 한나라·민주 "적법한 국회의 고유 권한" 청와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뜻 없다"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1일 원안대로 국회 가축법 특위를 통과한 가운데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21일 가축법 개정안 중 중단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법제처는 이날 "수입위생조건을 행정입법의 유형인 고시로 위임한 이상 고시의 제·개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의 심의라는 형식으로 고시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행정입법권과 3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제처는 "국회의 '심의'는 예산안이나 법률안과 같이 체계·형식·지구·내용 변경 등 모든 것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보다 훨씬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 혹은 상실시킬 우려가 많다"며 오히려 국회 '동의'보다 '심의' 조항이 행정권을 더욱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가축법 개정안은 법체계 상 문제, 국제기준과 충돌, 이해당사국과 통상마찰 소지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법제처에 개정안의 위헌 소지와 법 체계상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가축법 개정을 위해 당내 법률·국제통상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농식품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적 갈등을 걸러주기 때문에 정부도 편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표결 내용이 정부를 구속하는 내용은 아니며, 정치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구속하는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가축법 특위 소속 민주당 김종철 의원은 "하위법인 고시에 위임한 것을 상위법인 법률이 그 위임을 거부해 들어고 법률 그 자체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헌법이 법률로 정하게 할 입법사항을 법률보다 하위인 명령이나 규칙, 고시 등의 형태로 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정부 측의 위헌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청와대는 가축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정안 통과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일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 전소된 스페인어 소속 JK 5022편 여객기 주변에서 긴급 구조팀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고 비행기는 미국 맥도넬 더글러스사가 개발한 MD-82모델로, 제작된 지 15년된 노후 기종이다. /연합뉴스

## 스페인 여객기 추락 153명 사망

### 마드리드 공항 이륙 직후 엔진 불 붙어...생존 19명 중태

20일 오후 2시45분경(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공항에서 스페인어 소속 JK 5022편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153명이 사망했다고 스페인 정부가 발표했다. 마그달레나 알바레스 공공개발부 장관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여객기 추락사고로 10명의 승무원 등 172명의 탑승객 가운데 153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것으로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이날 사고는 최근 20년 사이에 스페인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최악으로 기록됐다.

이날 추락사고는 마드리드 공항을 이륙하자마자 여객기의 엔진에 불이 붙어 비상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활주로를 벗어나 추락한 마드리드 발 라스팔마스행 여객기는 곧바로 화염에 휩싸인 뒤 거의 전소됐으며 시신이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참혹한 광경을 보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긴급 구조팀원들은 "무려 1km 떨어진 땅이 불에 그을렸는가 하면 동체의 파편도 그곳에서 발견됐을 정도로 참상이었다"면서 "항공기는 거의 불에 탔으며 동체가 파손됐다"고 말했다. 사고 여객기에는 162명의 승객과 10명의 승무원 등 모두 17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승객은 서부 휴양지인 카니리아 제도의 라스팔마스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려던 가족단위의 피서객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 사고가 발생하자 헬기와 앰블런스 소방차 및 긴급 구조팀이 동원돼 구조 활동에 나섰으며 이 때문에 마드리드 공항은 한때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됐다. /연합뉴스

## 대통령기록물 '열람' 압수수색 영장 발부

### 검찰, 오늘부터 盧 前대통령 자료 비교·분석

서울고법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가 21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하드디스크 28개에 담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예초 하드디스크에 담긴 기록물을 열람하고 사본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록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영장을 발부한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은 '열람' 부분만 허용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군사·외교 문제

와 관련한 기밀 등이 포함된 '지정기록물'의 경우 대통령 퇴임 후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보려면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22일부터 경기 성남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분석 작업에 들어가 노 전 대통령 측이 돌려준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기록관에 담긴 PDF 형태의 자료 204만건과 일치하

는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분석을 9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 전 대통령 측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10명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들의 변호인인 김미경 변호사는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분석 권한이 있으므로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일단 분석을 맡긴 뒤 그 내용을 전해 받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KBS 사장 임기보장 위해 임명으로 바뀌" DJ, 해고 부당 입장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21일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논란과 관련,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공영방송인 KBS 사장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임기보장의 차원에서 '임명'을 '임명'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이뤄졌던 통합방송법 제정과 관련,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권'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면서 "강원용 당시 방송개혁위원장으로 부터 '임명'을 '임명'으로 바꾸자는 건의를 받아 결정했고 관계장관인 문광부 장관(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야협력이 필수적이라 이 과정에서 체포동의안 상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 미-러 정면대결 치닫나 그루지야 전쟁 싸고 긴장 고조

미, 폴란드에 미사일 배치 강행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간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0일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에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협정체결을 강행, 양국 관계가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는 국경으로부터 최단 180여km(115마일) 떨어진 곳에 배치될 예정인 미국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며 폴란드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까지 시사, 발끈하고 나섰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바르샤바에서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과 MD 시스템의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 10기를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달 8일 체코와 MD시스템의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기로 합의·서명한 뒤 한 달 만에 폴란드와 요격미사일 배치 협정도 체결함으로써 동유럽에 MD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미국은 MD시스템의 동유럽 배치가 잠재적으로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며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러시아도 미국의 강경입장에 물러서지 않았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런(미국의 동유럽 MD배치) 행동들은 유럽대륙에서 불신과 무기경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 문국현 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될까 각당 미묘한 입장차

검찰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18대 국회에 들어 처음으로 체포동의안을 다루게 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기 때문에 각 당은 당론을 내놓고 있지 않으나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의 자율권에

말긴다는 입장의 가운데 검찰 출두를 거부하고있는 문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인 반면 제 1야당인 민주당은 "검찰의 사정정국 조성과 국회 길들이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대 기류가 강하다.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어려운 분위기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 동의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형성되거나 '방탄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될 경우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하는 만큼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진 뒤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수순이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야협력이 필수적이라 이 과정에서 체포동의안 상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한아름에탁금**

**6.50%**

1년 만기 (한시판매)

두알신협

☎ 063-0136

**재혼만 10년!**

영특솔밭

527-3388

이 커를 매니저 직권 구함